

“정의로운 산업전환, 금속노동자 두 주먹에 달렸다”

23일, 금속노조 결의대회 ... “산업전환협약 체결, 공동결정법·노조법 제·개정 쟁취한다”

금속노조가 코로나 19와 경찰의 과잉 대응을 뚫고 노동부 앞에 모였다. 전국에서 모인 금속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산업전환협약 체결과 공동결정법·노조법 제·개정 쟁취를 외쳤다.

금속노조가 6월 23일 오후 세종시 노동부 앞



에서 ‘친재별·노동배제 산업전환 정책 폐기, 정의로운 산업전환·노조할 권리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중앙교섭 결렬·조정 신청과 공동결정법 입법 운동을 선언했다.

경찰은 어김없이 금속노조의 정당한 집회를 방해했다. 노조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위생수칙을 준수했지만, 금속노동자들이 결의대회장으로 이동하는 길목을 틀어막았다. 경찰이 방해해도 금속노동자들의 기세를 꺾을 수 없었다. 1,500여 명의 금속노동자들은 경찰 방해로 뚫고 기어코 한자리에 모여 금속노조의 저력을 확인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결의대회 여는 발언에서 “어제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와 10차 중앙교섭을 했다. 금속노조가 요구한 노동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노사공동선언을 사측이 마땅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 이제 단체행동권을 쓰고자 한다”라고 최근 중앙교섭 상황을 알렸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곳곳에서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완성차 2·3차 부품사에서 산업전환협약이 울타리가 돼야 하는데, 사측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면서, “현대자동차는 전주공장에 휴업 공고를 내렸다. 이는 서막에 불과하다”라고 노동배제 산업전환의 실태를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 19만의 단결과 조직력으로 노동자가 참여해 산업전환을 제대로 하자. 쉽지 않다. 그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민주노총과 함께 총과업으로 산업전환 쟁취하자.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금속노동자가 주도해 쟁취하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차덕현 금속노조 전북지부장은 대회 투쟁사를 통해 “수많은 노동자가 자본의 구조조정에 내몰렸다. 2021년 트럭과 버스 시장이 서서히 회복하고 있지만, 부품사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전북도

청, 군산시청 등 지자체와 노동자의 삶과 고용을 중장기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자고 대화하고 있다”라고 전북의 상황을 보고했다.

차덕현 노조 전북지부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몰락하는 업종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지난 정부들은 항상 뒷짐만 지고 있었다. 노동자의 미래와 삶을 위해서 노동자 대오가 올바른 산업전환 정책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라며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차덕현 전북지부장은 “내 삶은 내가 지킨다. 우리 현장과 고용은 내가 지킨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두 주먹에 달려 있다”라며 “현장을 조직해 금속노조 요구안을 완전히 쟁취하는 금속노조 조합원이 되자”라고 조합원의 투쟁 동참을 호소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30명, 7차 불법파견 소송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제철소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 기자회견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열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230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7차 집단소송’을 냈다. 이들은 포스코에 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이해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6월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 7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의 정규직 노동자라고 연이어 판결하고 있다”라며 “포스코는 당장 금속노조와 정규직 전환 관련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2011년 5월 13일 1차 집단소송을 접수했고, 2016년 8월 17일 광주고등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올해 2월 3일 광주고등법원은 2차 집단소송에 참여한 노동자 44명, 2월 18일 순천지방법원은 4차 집단소송에 참여한 노동자 219명을 포스코의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한결같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나, 포스코는 대법원이 판결할 때까지 버티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정준현 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2011년 이후 10년 동



안 하청노동자 933명이 불법파견 소송을 일곱 차례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언제까지 노동조합과 이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정준현 지부장은 “포스코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하루속히 정규직 전환대책을 내놔야 한다”라며 “세계와 산업은 급속히 변하고 있는데 포스코만 가라앉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한다”라고 꼬집었다.

정용식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포스코는 법원 판결을 뭉개고, 금속노조의 특별 단체교섭도 거부하면서 6월 24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 불러 노사상생 협약식을 벌인다”라면서 “정작 대화를 해야 할 상대인 사내하청노동자는 멸시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정용식 지회장은 “포스코는 고등법원 판결 이후 2017년 하청노동자들 소송을 막기 위해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 명목으로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임금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용식 지회장은 “포스코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사내하청노동자를 기만하면,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의 하청노동자 18,000명 모두 정규직화 소송 당사자로 조직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소송에 참여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성광기업 4명, 시오엠테크 21명, 포스코엠텍 4명, 포에이스 2명, 포트엘 22명과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동일기업 18명, 롤앤롤 12명, 포롤텍 109명, 포지트 7명, 피에스씨 29명, 화인텍 2명 등 모두 230명이다.

이 노동자들은 포스코의 직접 작업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 이번 7차 집단소송까지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933명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작은 사업장 노동자, 공휴일 쉬지 마’ 민주노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쉼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열어



노동자들이 국회와 정부에 360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평등한 쉼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평등한 쉼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차별과 배제 없는 권리보장을 위해 법 개정 등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월 16일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 드리겠다’라며 국회에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것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홍보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공휴일이 유급 휴일이 됐지만,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공휴일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민주

당이 ‘국민 공휴일 법’이라 부르는데, 적게 잡아도 360만 명에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면서, “정부는 한술 더 떠 이 법안이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며 버티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노동자들은 “코로나 19 사태는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회안전망과 법 제도로 보호할 계층이 누구인지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차별과 배제투성이 근로기준법이 문제다”라며 “공휴일마저 양극화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최정주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은 “지회 소속 종로 주얼리 노동자들은 노동절에 제대로 쉬자, 눈치 보지 않고 연차휴가를 쓰고 싶다는 등의 요구를 걸고 2018년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라며 “금속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투쟁해 노동자와 업체들이 2019년부터 노동절을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강성희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민주당은 법안에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배제했다”라면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짓이다”라고 꼬집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휴가가 없으며, 해고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월 23일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9일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